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향락



이명박 정권 들어 호남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부감은 여전히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이라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닐까. 김대중 정권을 탄생시키고, 노무현 정권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왜 속앓이를 해야 하는가. 또 그들의 주장이 과연 보편화되는 것인가.

무엇을 잃어버린 10년인지, 김영삼 정권처럼 나라를 부도로 몰아넣은 것인지, 할 말이 많은데 우리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할 때 때문이다. 경상도 쪽, 보수언론들, 그리고 오랜 시절 기득권을 누렸던 소위 '가진 자'들은 이를 두고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끌어내고, 대구 쪽은 한술 더 떠 '잃어버린 15년'이라고까지 떠들어댄다. 김영삼 정권 5년이 '부산정권'이자 '영남정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5·18이 민중 반란이라니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빼앗겼다'는 우회적 표현일 뿐이다. 주인 행세를 하다 한 쪽으로 비켜나 앉아 눈치를 봐야 했

으니 빼앗겼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정권은 언제까지나 그네를 둑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호남은 그동안 잊어버린 세월이 얼마인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거쳤으나 무릇 40년에 가까운 세월이다. 호남인들은 그 오랜 세월 속에 푸대접으로 그렇게 낙후됐어도 '잃

잃어야 할 세월은 또 얼마인가

'버린'을 말하지 않았다. DJ가 대통령이 됐어도 '잃어버린'을 내지 않았다. 물론 잊어버려서 아니라 더 이상 잊을 게 없었기 때문이다.

DJ정부 시절 역차별이 적지 않았지만 '대통령' 자체로서 위안을 삼았다.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에 삼성자동차 공장을 주자 앉혔어도 우리는 DJ정부에 동일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산정권'임을 당연시했다. 그 10년 간 호남에 무엇을 해주었는지 한참 생각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럼에도 그들은 '악가는' 표현조차 서슴

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가리켜 '좌파정부'라 규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좌파 친북성향의 정부'라고 매도한다. 그렇다면 90% 이상의 지지로 대통령을 만든 호남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영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5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학술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 반란'이라고 매도했다.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밝혀 용서와 화해를 하자는 국가기관 수장의 의식이 이 정도인데 이 정권은 왜 모든 체 하는가.

'좌우 줄세우기'는 밥그릇 탓

그렇다면 집권 3년 가까이 된 이 정권은 과연 제대로 한 게 있는가. 단편적인 예이지만 대북 강경정책을 협약한 이명박 정부의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보다 낮은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노 정부 때인 지난 2006~2008년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8.0%를 기록한 반면 현 정부의 2009~2011년 증가율이 5.6%에 불과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대북정책에 있어 강경 일변도로 나간 만큼 철통 방위태세는 그 전제였다. 그럼에도 책임을 '잃어버린 10년'에 전가시키려는 것은 좌우를 갈라 줄을 세우겠다는 의도와 같다. 헷갈린 정책은 곧 친북성향으로 간주된다.

이제 호남사람들은 뭔가 선택을 해야 한다. 잊어버린 세월을 찾아야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2년 뒤 대선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될 만한 인사라면 가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야 속앓이로 면하지 않겠는가.

〈논설주간〉 hlsin@kwangju.co.kr

기고

홍진태



한참 오래됐지만 아직도 적잖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모 방송사의 '양심냉장고'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양심적인 운전자에게 냉장고를 선물함으로써 올바른 애정을 사회의 귀감이 되게 했던 프로그램이었다.

제1호 양심냉장고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건널목에서, 그것도 그냥 지나쳐도 뛰법한 새벽녘에 정지선을 치킨 어느 장애인 부부에게 돌아갔다. 그 장애인부부는 정말 태연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우리도 당당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석처럼 이를다운 두 부부의 언행에 시청자들은 모두 감동했었다.

한편 '따지와의 전쟁'이다. 지속성과 강제성을 지닌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경찰, 시민단체 등 인원 6만여 명이 참여해 전단지 300여만 매를 수거하는 등 정비와 단속을 벌였다. 특별합동단속을 통해 성매매업주, 인쇄업체 등 48명을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한 후속조치도 단행했다.

그 결과, 광주시내 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바뀌어 가는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또, 법무부의 자자체 법질서 확립 우수사례로 선정돼 타시도에서 벤치마킹 사례가 잇따르는 등 성공적인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를 1위라는 오명을 벗고 민주·인권·평화도시에 걸맞은

'광주정신'의 출발점은 작은 일에서부터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에 내놓아도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래테르를 당당히 알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해답을 바로 그 장애인부부에게서 찾어야 할 것이다.

등고자비(登高自卑)라는 말이 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라는 의미다. 우리 광주는 동학혁명에서부터 광주학생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비마다 이를 외면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했던 정의로운 도시다. 이순신 장군께서 '야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 이르렀다. 역사가 증명하는 호남의 고결한 정신을 바탕으로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러자면 작은 일부터 개선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광주시는 민선 5기를 맞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인 시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지난 7월부터 음란성 불법 전단을 뿌리뽑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시작했다.

높은 교통사고율은 교통질서에 무감각한 시민의식, 잘못된 운전습관,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보행문화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시민의식의 변화가 우선이다.

혹자는 '캡페인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광주시민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회가 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주인은 광주시민이다. 광주시민의 소망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광주시민의 품격도 달라진다.

시민이 행복한 조건의 중심도시 광주는 다른 아님 '시민정신'에서 나온다. 행정은 민주·인권·평화에 뿌리를 둔 시민정신을 지원하고 시민의 힘으로 광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작은 일도 반드시 지키는 것, 광주정신의 출발점으로 삼자.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돈 많이 들고 산모에게 안 좋은 제왕절개를 너무 높아

우리나라 산부인과 10곳 가운데 3곳이 제왕절개 분만을 많이 했고 일부 병원은 제왕절개율이 82%에 달했다는 심평원 자료를 봤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다시 제왕절개를 할 확률도 높아지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도 안 좋다. 뿐만 아니라 병원비에 대한 환자 부담이 수밖에 없다. 자연분만의 경우 출산 후 3~4일 입원하는 것이 보통이지

만 제왕절개를 하면 후유증을 감안해 7~10일 입원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제왕절개를 자양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학 수준이 세계적으로 뛰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제왕절개가 유난히 많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겠다.

▲박나영·광주시 남구 구소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지역 예산 안보·정쟁에 매몰되는 일 없어야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4대강사업 예산과 청와대 민간인 사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점에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앞친 데 덮친 미래를 결정할 주요 현안예산이다. 따라서 이들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지역의 미래 청사진은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한 지역 주요사업 예산도 솔직처리돼서는 안 된다. 특히 여수엑스포 SOC 사업 예산은 시기적으로 내년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국회가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을 최우선과제로 중시한다면 정치적 현인들을 앞세워 내년 예산안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특히 지역예산을 다른 정치 쟁점들의 처리와 연계해 흥정상으로 삼거나 누락시키는 일을 재연한다면 지역민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리 폐사, 구제역 우려까지 대책 시급하다

최근 전남지역 농가에서 사육 종인 오리가 집단 폐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이번 폐사의 원인이 AI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안동지역에서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한우 5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구제역이 확산될 조짐을 보여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지역에서 사육 종인 오리 629만 마리 중 40%인 251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오리 폐사 3개월이 지난도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들은 이미지 실주와 소비 감소 등을 우려해 쉬워하고 있다.

특히 안동지역에서 돼지에 이어 한우까지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과 사육 농가로서는 얼친 데 덮친 격이다. 구제역은 전염 경로가 다양하고 전파 속도가 빨라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또 폐사 원인이 법정 전염병이 아니고,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과밀 입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저지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안동지역에서 돼지에 이어 한우까지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과 사육 농가로서는 얼친 데 덮친 격이다. 구제역은 전염 경로가 다양하고 전파 속도가 빨라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당국은 구제역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동지역의 구제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리에 폐사, 소까지 문제가 생길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닌가.

無等鼓

그 어떤 '기이한' 세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도, M이론의 눈을 통해보면 우주에 무한히 존재하는 다양한 세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론이긴 하지만 전세계 이론물리학자의 거룩한 호킹 박사의 주장인데다, 현실적으로도 이곳 IT업계에서 최고의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또 다른 우주에서는 불우한 실업자에 불과 할 수도 있다는 이야 기여서 관심을 끈다.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연평도를 폭격하는 등 갈수록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한국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삼가는 모습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심ぶ 이해하지만, 무모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북한엔 분노를 급할 수 없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세상은 우주 어디에 있는 걸까.

진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10개의 공간과 1개의 시간차원으로 이뤄진 11차원의 시공간'이라고 설명하는, 일종의 다중우주(Multiverse)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존재하는 우주는 지금 이곳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무수히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은 물론,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지 만 한국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삼가는 모습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심ぶ 이해하지만, 무모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북한엔 분노를 급할 수 없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세상은 우주 어디에 있는 걸까.

/총행기장경복지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 기획 222-515 문화 흥 보 국 2200-541

면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시팀 2200-685

경영 기획 2200-555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